

‘통합특별시’ 명칭·청사 소재지 놓고 ‘의견차’

양부남, 광주·전남 땐 전남…전남광주 맨 광주 교차 제안
강기정 “판도라 상자 열면 끝없어”…김영록 “특별법 집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주 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명칭·청사 ‘빅딜’ 협동안을 제시한 반면,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담을 자치와 재정, 특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의에 이견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차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명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며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통합 명칭을 둘러싼 상징적 갈등을 청사 위치 문제와 연계해 풀어보자는 제안으로, 광주 중심 통합에 대한 전남 지역의 경계심과 광주시 위상 약화 우려가 맞물린 최근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

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동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균형을 고민한 제안”이라며 “지금은 작은 차이를 놓고는 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큰 단결과 통큰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은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명칭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된다”며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 받을 것이나, 특례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도 “도민 공청회를 가면 여러 육구가 분출해 (명칭 등) 작은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런 것보다 특별시가 됐을 때 제도, 조례를 수용해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단체 명칭을 광주가 앞에 있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광주전남특별시는 그 아래 광주 5개 자치구와 22개 전남 시·군을 두는 27개 시·군·구 체제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을 두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간접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신안군 도민공청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국립의대 정원 100명 유력…2030년 첫 입학

복지부, 의사 양성 규모 논의…지방대 정원 감안
지역의사제 병행…이르면 내달 3일 최종 확정

전남에 신설될 국립의과대학의 정원 규모가 100명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학 시점은 2030년이 유력하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 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모델들은 2037년 기준 의사 수가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이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5,015~1만 1136명으로 봤던 기존 추계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 같은 추계를 토대로 정부는 2030년 입학이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전남 신설 국립의대의 정원을 각각 100명으로 설정 했다. 공공의대는 이제껏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졸업생은 국립중앙의료원, 국

립재활원, 소방·경찰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사 부족해야 한다. 전남에 들어설 신규 국립의대 역시 정원 100명 안팎으로 정리됐다.

올해 기준 지방 국립대 의대의 모집 인원이 학교별로 최소 40명에서 최대 142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전남

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불

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상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입학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입학 정원